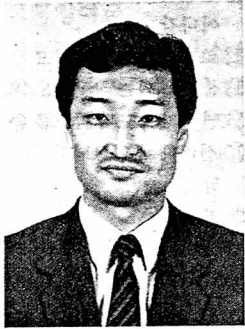


# 정보주권론과 우리의 정보산업



方碩皓  
(통신개발연구원 정보문화실장)

● 약력 ●

서울대 법대 졸업, 동대학원 수료.  
미국 듀크대학 법학 석사.  
동대학 법학 박사.  
현 통신개발연구원 정보문화실장

## 통신서비스 경쟁력 정보의 '質'이 최우

올 2월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인 미국으로 부터 그들의 종합무역법에 의해 통신분야에서의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이래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대한 찬반논쟁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주제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사실은 '80년대 우리의 통신정책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긍지를 느끼게 하면서도, 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무역관행을 이유로 한 불명예스러운 지정이라는 점에서는 자기반성을 요하는 양면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반성이 제기되는 측면과 국내 통신시장의 속사정과는 실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신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적받을 만큼 정보를 담는 그릇인 우리의 통신기기시장은 판매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을지언정, 그 안에서 흘러가는 정보자체의 유통, 즉 그릇안의 내용물은 빈약하기 짝이없어 외모로 인해 실속까지 오해받는 처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보의 흐름이 빈약하다는 것은 양적·질적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신시장의 자유

화에 따라 증가되는 기업과 같은 법인 데이터의 흐름이 미국 등의 통신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 뒤질 뿐 아니라, 데이터의 질 역시 외국기업이 제공하는 것에 비해 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데이터의 질은 국내의 통신서비스의 경쟁을 이야기할 때 경쟁력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와 같은 무형의 재화에 대한 경쟁력 인정은 '80년대에 국제사회에서 무역에 대한 장벽을 논하면서 발달시킨 중요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더우기 통신서비스의 경쟁가능성, 이로 인한 경쟁제한의 형태 등이 후에 살펴볼 정보주권론과 맥을 같이 하면서 국제사회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정보주권론이 정보의 흐름에 대한 규제를 위해 탄생한 순수한 이론적 결과물이 아니라 자국 정보산업의 보호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정보의 유통이 갖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살펴본 다음, 부정적 측면에서 제기되는 정보주권론의 실제 파악을 통해 이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 정보유통의 두가지 파급효과

기업정보의 경우, 특히 다국적 기업 일수록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국제사회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국제무역상의 국가간 쟁점으로까지 확대·연결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업활동 가운데 재무관리(financial management)에 관한 정보가 국제간 정보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수를 훨씬 넘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전세계를 상대로 한 정보의 유통, 즉 TDF는 기업활동에 있어 성패를 가름하는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가져오는 긍정적 측면외에 정보의 유통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프라이버시침해, 정보종속, 정보주

권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프라이버시침해 문제는 처음에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에 제동을 거는 근거로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적 보호주의, 더 나아가 정보주권론을 정당화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근거로서 채용되는 등 경제적 관점에서 정보의 흐름을 규제하는 이유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정보종속, 정보주권의 논쟁 역시 개인에 관한 데이터, 기업에 관한 데이터, 국가에 관한 데이터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흐름속에서, 또한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측면의 견해들과 뒤섞여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규제하기 위한 필요성의 근거로 주장되어 왔다.

## 정보자원의 '결핍' 대외종속 가속화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인식해감에 따라 무역에서의 보호주의 무역정책과 같이 정보유통에 있어서도 국내 정보산업과 시장을 외국의 침투로부터 보호, 육성하기 위해 장벽을 세우는 경우가 늘어났다.

특히,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모든 경제활동에서 정보부분의 역할이 중대됨에 따라 정보산업 자체의 발

전이 국가경제의 발전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차원의 국가경제적·전략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간 데이터흐름의 구조가 개발도상국들은 처리안된 데이터(raw data)를 선진국에 공급하고, 선진국으로 부터는 가공·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받아 이용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대부분의 정보자원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정보자원의 종속이 가속화될 수 있음이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국제간 정보흐름의 구조가 개발도상국들은 처리안된 데이터를 선진국에 공급하고, 선진국으로 부터는 가공처리된 데이터를 다시 받아 이용만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대부분의 정보자원이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속에서 정보자원의 종속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즉, 정보의 흐름이 가져올 수 있는 주된 부정적 관점은 정보자원이 해외를 통해 쉽게 획득되어질 수 있다면 굳이 열등한 국내 정보자원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그 결과 국내 정보자원의 개발을 통한 정보산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게 되며, 이는 곧 한 국가의 고용과 국제수지측면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우려에 대한 것이다.

다시말해, 국내 정보자원의 결핍은 국내 정보산업의 대외중속을 증가시키며, 이는 곧 자국의 고유한 기술능력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고 TDF에 대한 주된 부정적 시각의 대두배경을 정리할 수 있다.

### 정보주권론 정보통제권과 '일맥상통'

이러한 맥락에서 대두된 정보주권론은 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가 외국에 위치한 정보자원에 의존하고 있을 때 과연 주권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는가? 하는 비판적 물음에 대한 간접적 대답으로 구체화되어 발전돼 왔다.

즉, 물리적 경계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자활성과 문화적 일체성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어 온 전통적 의미의 주권 개념이 TDF의 확대추세에 의해 전세계가 정보 자체에 기초를 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의 권한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정보주권론은 결국 정보자원의 개발, 이용에 대해 각국이 통제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국가간 정보유통에 대한 과세 및 구체적 규제 방법들까지 논의, 발전되고 있다.

정보주권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그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함축적 의미를 달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국가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외국 소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저장되고 있을 때 제기되는 정보주권론처럼 주로 국가에 관한 정보를 둘러싸고 논의되는 측면도 있고, 정보의 종속논쟁과 같이 정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항구적인 노동의 분업현상과 같은 개인데이터, 특히 기업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측면도 있다.

또한 위성을 이용한 방송, 탐사처럼 정치·사회·문화적 측면

에서 제기되는 정보주권론도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의 통신협상시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택한 선대내 개방, 후대의개방의 입장과 정보주권론의 개념과는 그 범위와 맥락상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할수 없다.

국제간 통신협상 차원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을 끄는 정보의 흐름부분은 TDF가운데 기업에 관한 데이터의 흐름이라 할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련된 개인 데이터의 흐름, 국가주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가기밀에 관한 정보의 흐름따위는 자국의 재량권에 의해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영역들이다.

오히려 이처럼 정보주권론이라는 이름하에 기업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막힘으로써 국제간 기업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측면에서는 프라이버시보호, 정보주권론의 주장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할수 있다.

### 강한 보호는 '온실속의 화초' 초래

여기에서 정보주권론의 구체적 실행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통신정책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DF가운데 기업에 관한 데이터의 경우처럼 정보자원의 개발, 처리, 가공 등을 둘러싼 자국의 정보산업 보호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우는 정보주권론의 주장이 보호주의 내지는 인위적 무역장

벽의 설치로 비쳐지는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정보주권이란 이름하에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는 정보주권론을 앞세워 대외시장 개방을 지연 시킴으로써 우리의 정보산업이 자생적으로 발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느냐 없느냐의 측

면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이 잘 나타나는 구체적인 예로 국제간 금융결제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컴퓨터와 통신이 맞물려져 온라인을 통해 전세계 어디서나 외환거래, 잔고출납, 대금결제 등이 가능해지는 오늘의 현상은 돈의 흐름에 대해 통제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통적 주권론자들에게는 분명히 충격적인 발전이며, 이들이 의존했던 규제수단의 실효성있는 집행은 그 타당성이 지극히 의심스럽게 되어 있다.

오늘의 국제사회에서 정보주권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전세계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규제를 통한 반사적 이익으로 국내 금융업계가 이러한 서비스의 자체 개발, 보급을 충분히 함으로써 국제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금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 등 많은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자국의 정책 의지, 정책을 펼 수 있는 환경 등의 변수가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서 강조할 사항은 우리 기업의 서비스, 제품이 보호를 통해 항상 더 나은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정책방향은 다른 시장에서와 같이 통신시장에서도 반드시 경제적 의미의 희생적 반대급부라는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과는 달리 국가에 관한 데이터,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정보주권론이라는 이름하에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 결단의 방향설립이 보다 쉬운 부분이다.

특히 사회, 문화적 측면의 성격이 강한 위성을 이용한 직접방송의 경우 정보의 흐름을 규제해야 함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주권론의 적용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동감을 얻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올바른 이해와 정책방향 수립이 관건

결론적으로 정보주권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90년대의 통신정책 방향은 정보 자체의 종류, 성격에 따라 달리 파악되고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간 정보의 흐름 가운데 상당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고, 향후 더욱 늘어날 다국적기업의 활동에 기인한 영역은 정보주권론을 앞세워 규제하는데 있어 다음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우리의 해당 정보산업이 보호를 통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보호가 정당될 정도로 장차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 산업인지에 대한 긍정적 해답이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 이러한 경제적 측면보다는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 등에서 주장되는 정보주권론에 대한 우리의 정책수용 여부는 별 어려움없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정보주권이란 이름하에 모든 데이터의 흐름이 인위적으로 막힌다면 우리의 정보산업은 자생적 발전뿐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규제와 개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